

시장·지사 추석 뒤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통합 밑그림 제시될 듯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국가불균형의 시정 노력,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대의명분에는 찬성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칫 통합 논의가 소모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며 단계적인 실천을 통해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추석 연휴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남을 갖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통합 논의의 밑그림이 제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추석 이후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이 시장과의 회견에 앞서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등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의 회견을 앞두고 지난 1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지역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을 만나며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뿌리고, 광주·전남 통합은 다들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 선결과제 해결을 강조했다.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 극일 체제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불균형 시정과 함께 재정 분권 등 실제적인 자치 분권의 강화,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과거 2차례 무산됐던 시도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면서 "세세하게 의견을 수렴하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시·도민 의견을 담아낼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 21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대전·세종도 통합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광역시와 도(道)의 통합 또는 상생협력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전남 역시 현안에 대한 상생협력과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권 상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쇄신과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정해두고 서두르기보다는 하나씩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의 공식 만남은 지난 2018년, 2019년 11월 단 두 차례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 연휴 뒤 예정된 회담이 광주·전남의 해묵은 갈등·마찰을 종식하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난 십수년간 정부 주도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졌으며, 광주·전남의 위상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이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거대 중부경제권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北 우리국민 피격 용납 못해”

“충격적 사건...국민 분노할 일”
숨진 공무원 안도 출신 40대
월북 가능성 놓고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보정보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을 통해서도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22일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웠다.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이모(47)씨는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특히 북측은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 중이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던 A씨에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한 뒤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국경지대에서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무조건 사격하는 반인륜적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은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

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0대 가장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이씨는 안도 출신으로 안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12년 12월 서해어업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해경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의 피해자가 제 동생”이라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꼭 짚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일 정상 전화회담 “강제징용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제안했고,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매

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지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 첫 통화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이날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

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 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약 20분간 진행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무죄 확정 ▶6면
-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회의 ▶14면
- 광주FC 박진섭 감독 '목표는 5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6대 핵심사업 3조 7599억원

기업의 산실, 광주의 산업단지가 확 바뀝니다

- 1 호남권 17년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1조 2433억 투자
- 2 노후산단을 새롭게, 신규산단을 첨단으로 만드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7656억 투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 3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5754억 투자
- 4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광주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4116억 투자
- 5 빛그린산단, 평동산단 일대에 '청정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7640억 투자
- 6 남구 에너지산단 중심 '국내 최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7200억 생산유발효과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www.gwangju.go.kr